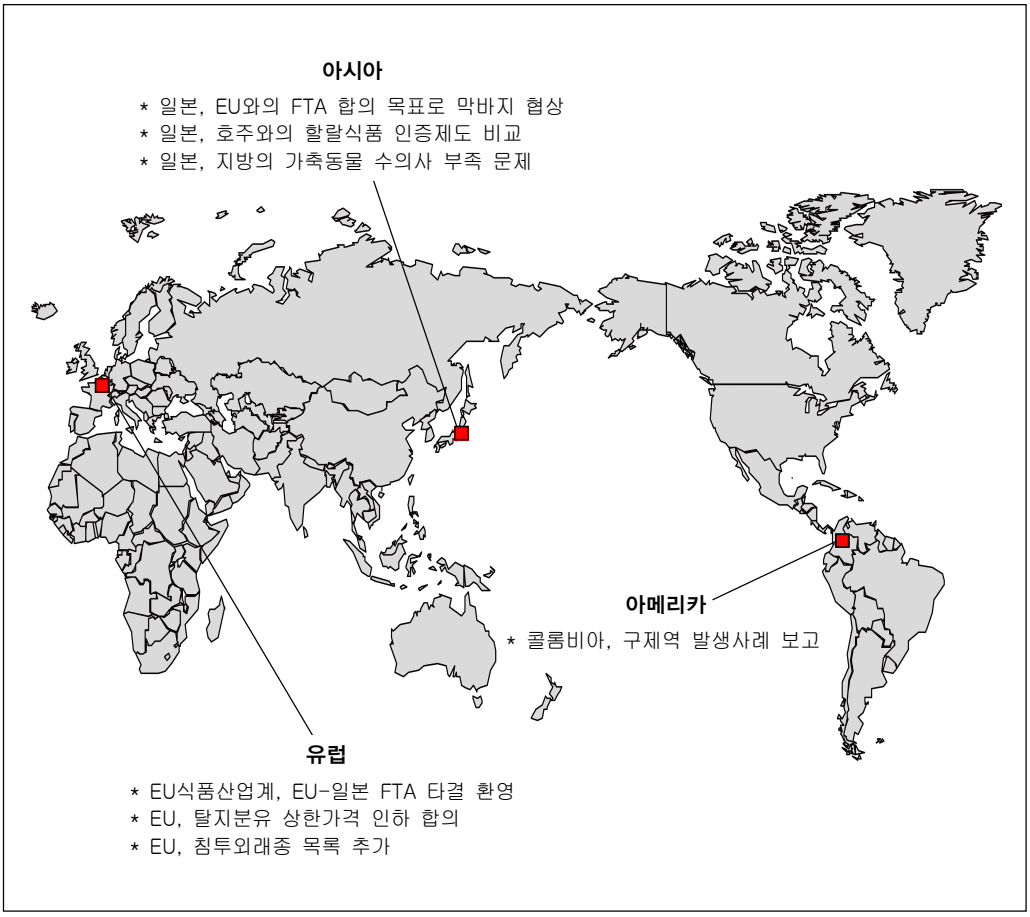
PART 05



국제 농업 정보

1. 일본, EU와의 FTA 합의 목표로 막바지 협상
2. EU식품산업계, EU-일본 FTA 타결 환영
3. 콜롬비아, 구제역 발생사례 보고
4. EU, 탈지분유 상한가격 인하 합의
5. EU, 침투외래종 목록 추가
6. 일본, 호주와의 할랄식품 인증제도 비교
7. 일본, 지방의 가축동물 수의사 부족 문제

국제 농업 정보 (2017. 7)



일본, EU와의 FTA 합의 목표로 막바지 협상

❍ 일본과 EU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EU는 일본에 대해 쇠고기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는 EU산 쇠고기 수입량은 적지만, 원유 생산 조정 폐지를 단행한 EU에서는 젖소 생산이 늘어나면서 수출 기대가 강함.
- 일본은 EU의 시장개방 요구를 수락하면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추가 시장개방을 요구할 우려도 있어 거부한 바 있으나, 현재 공방이 계속되고 있음.

❍ 일본이 수입하는 쇠고기는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 EU산 수입량은 576톤(2016년 기준)과 일본의 국내 유통량의 0.1%이며, 폴란드, 아일랜드, 프랑스산 등은 일부에 그침.

❍ 한편, EU는 2015년에 원유 생산 할당제를 폐지하였음. 이에 향후 원유 생산 확대와 함께 젖소 두수의 증가도 예상되고 있음.
- 관계자에 따르면 수젖소(乳雄)의 쇠고기 생산이 위협이 된다고 분석함.
- EU측은 쇠고기에 대한 관세(38.5 %) 철폐와 낮은 관세 수입 물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송아지의 수출 확대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16년 만에 9% 수준까지 낮추기로 합의함.
- 만약 일본이 EU와의 협상에서 TPP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하면, 미국과 호주가 일본에 추가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짐.

❍ 일본과 EU협상단은 일본-EU간 자유무역협정의 큰 틀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막바지 협상을 계속함.
- 농산물시장과 자동차 등의 관세 협상과 비관세 조치, 정부 조달, 지리적표시(GI) 등 7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EU가 파스타와 초콜릿 등 가공식품의 관세 인하 및 철폐를 요구하였으며, 치즈에 대한 공방은 계속되고 있음.

※ 자료: 일본농업신문(日本農業新聞) (2017.06.22.)

EU식품산업계, EU-일본 FTA 타결 환영

EU-일본간 자유무역협정 타결

❍ EU와 일본간의 FTA인 JEFTA가 2013년 협상 개시 이후 4년 만에 타결됨.
- 7월 6일 브뤼셀에서 발표한 EU-일본 간 자유무역협상 타결로 일본은 EU로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 수출시장이 열리는 대신 유럽 농산물에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데 합의함.

❍ JEFTA 공식 발표 이후 EU와 일본 양측은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협정문을 만들고, 이후 일본과 EU 각 회원국의 비준을 거칠 예정임.

EU 식품 및 식음료 산업계 환영

❍ 유럽 식품 및 식음료 산업계는 일본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단계로 새로운 JEFTA를 환영함.

❍ EU 식품 및 식음료 수출부문에서 일본은 4번째로 큰 수출시장으로, 2016년 기준 49억 유로로 2015년 대비 약 5% 증가함.
- 반면 EU는 2016년 기준 일본으로부터 2억 5,700만 유로의 식품 및 식음료제품을 수입함.

❍ 유럽 와인생산자협회(European wine producers' organization, CEEV)는 지난 4년간의 회담을 마친 무역협정 타결을 환영하며, 일본으로의 와인 수출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함.
- 유럽 와인생산자협회장(Jean-Marie Barillère)은 EU 농식품부문에서 최초로 수출한 품목으로, JEFTA로 인해 현재 와인 수출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장벽이 제거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함.

❍ 또한 그는 일본 와인시장은 약 55개국의 와인이 공급되는 매우 경쟁력 있는 시장이며, 일본 와인시장에서 유럽의 점유율은 일본 내 관세철폐의 혜택을 받는 다른

국가의 와인과의 경쟁 심화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함.

- 특히 주요 경쟁국인 칠레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일본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였음

❑ 유럽의회 및 EU회원국 의회 승인 절차

❍ 일단락된 JEFTA는 유럽의회와 EU회원국 의회 승인절차를 남겨두고 있음.

- 유럽국민당(European People's Party, EPP), 사회당민주당(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and Democrats, S&D), 자유당((European Liberal, Democrat and Reform Party, ALDE), 유럽보수 개혁당(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ECR) 등 4대 주요 정당이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유럽의회 승인은 확실할 것으로 보임.
- 반면 유럽통합좌파 및 북부 녹색좌파연합(European United Left(GUE) group and the Greens)은 무역협상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주의를 촉구함.

※ 자료: Agra Europe (2017.07.07.)

콜롬비아, 구제역 발생사례 보고

❑ 콜롬비아, 구제역 발생사례 보고

❍ 콜롬비아는 8년 만에 2013년 이후 남미지역에서는 처음 발생한 가축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FDM) 발생 사례를 보고함.

- 이는 2013년 베네수엘라와 2012년 말 파라과이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후 남미 지역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사례임.

❍ 콜롬비아 당국은 세계 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보고서를 통해 베네수엘라 국경 부근의 아라우카(Arauca)지역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2~3세 사이의 7마리 육우에서 전염성이 높은 구제역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함.

- 구제역은 소, 돼지, 사슴, 염소, 양과 같이 발굽이 갈라진 동물 사이에서 전염됨. 또한 가축간의 접촉, 전염된 동물의 고기 섭취, 농기구 및 차량 등을 통해 전염될 수 있음.

❍ 콜롬비아는 2,000만 두수 이상을 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예방접종을 통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국가로 인정받아 왔음.

❍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인접국 이외 다른 국가로 많은 물량의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았으나, 최근 러시아 등으로 수출을 확대한 바 있음.

❍ 콜롬비아 구제역 발생으로 페루는 콜롬비아 전역에서 공급되는 쇠고기 수입을 180일 동안 잠정적으로 중단할 할 것이라고 발표함.

- 칠레 또한 구제역을 이유로 콜롬비아산 쇠고기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함.

❍ 콜롬비아 당국은 최근 구제역 발병 사례가 베네수엘라 동물의 국경 이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음.

- 반면 이전 베네수엘라의 조류독감 확산 방지 대응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남미지역은 지역적인 계획을 통해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이 필요 없는 궁극적인 구제역 근절을 목표하였으나, 이번 콜롬비아 사례로 좌절됨.

- 브라질은 최근 몇 년 동안 구제역 백신 예방 접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시작하였음.

※ 자료: Agra Europe (2017. 06. 28.)

EU, 탈지분유 상한가격 인하 합의

EU, 탈지분유 상한가격 인하 합의

❍ EU회원국들은 EU지역의 탈지분유(Skimmed Milk Powder, SMP) 비축분에 대한 가격 인하에 합의함.

- EU 회원국들은 최근 입찰라운드에서 결정된 톤당 상한가격 1,850유로를 받아들임.

❍ EU성명서에 따르면 탈지분유는 현재 시장가격에서 톤당 150유로(100kg당 15유로)가 할인되었으며, 이는 2년이 지난 비축 물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해가능한 수준임.

- EU집행위원회는 처음으로 오래된 탈지분유가 더 낮은 가격을 가져야 한다고 인정함.
- 지난 12월 이후 처음으로 상용 판매된 물량은 단 40톤이며, 톤당 2,151유로에 판매되었음.
- 최근 가격은(EU 매입가격인 1,698유로를 감안하여) 재고보관 비용을 제외하고 톤당 152유로의 프리미엄(premium)을 제공함.

❍ 벨기에와 폴란드 기업들의 1,340톤에 대한 입찰가에 따라 탈지분유 100톤의 판매가 합의됨.

- 증가된 판매 자체로 흥미로우며, 이는 식품 및 유제품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의미함. 이전 두 차례의 입찰에서는 겨우 240톤만이 적용되었음.
- 또한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예상보다 낮은 우유 생산량이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음.

생산량 감축

❍ 독일의 이른 추운 날씨와 남부 유럽의 너무 더운 날씨 등 열악한 환경과 2015-2016년 역사적인 낮은 우유가격으로 많은 낙농가들이 투자를 줄이거나 생산을 중단하였음.

- 또한 농민들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EU의 우유 감축 계획을 촉구하였음.

❍ 최근까지 EU 탈지분유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계약기간에는 톤당 1,925~1,812유로로 하락함.

- 지난 주 IEG Vu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2,000유로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거래시장은 조용한 편이었음.

❍ 작년 말 탈지분유 판매에 대한 개입이 시작되면서 시장에 탈지분유가 넘쳐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러한 우려는 보조정책으로 다시 가라앉은 바 있음.

❍ 그러나 이달 초 EU집행위원회 농업농촌개발 집행위원인 Phil Hogan은 비축된 탈지분유 공공 물량은 우려할 수준이며, 이는 시장 회복을 지연시킨다고 인정하였음.

※ 자료: Agra Europe(2017.06.26.)

EU, 침투외래종 목록 추가

❍ EU집행위원회는 EU 전역에서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침투외래종(invasive alien species) 목록에 12종의 새로운 종을 추가함.
- EU집행위원회는 침투외래종위원회(Invasive Alien Specoes Committee, IAS) 결정에 따라 7월 12일 악어잡초(alligator weed), 사향 쥐(muskrat), 너구리(raccon dog) 등을 새로운 침투외래종으로 지정함.
- IAS는 EU회원국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위원회 대표가 주재함.

❍ 침투외래종 목록에 포함되는 종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보건비용, 작물수확량 손실, 어류자원 손실 및 기반시설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큼.

❍ 2015년 1월에 발효된 침투외래종에 관한 규정(Regulation 1143/2014)은 침투 외래종과 관련하여 EU전역에서 취해야 하는 일련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EU회원국들은 침투외래종의 예방,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박멸을 목표로 하는 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
- 일부 종이 이미 확산된 경우 EU 회원국들은 EU전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 침투외래종 목록에 12종의 새로운 종이 추가되고 20일 이후부터 침투외래종 관련 조치 및 규정이 적용될 것임.

❍ EU집행위원회의 공동연구센터는 최근 침투외래종 37종에 대하여 분포 현황을 발표함.
- 이는 EU회원국들이 침투외래종 관련 EU규정 실행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표적 종에 대한 감시체계를 수립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공유되는 생물지리학적 지역 내에서 협력과 조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최근 Copa-Cogeca 사무총장(Pekka Pesonen)은 AIS위원회 결정과 관련하여 추가된 12종 중 3종에 대하여 농업공동체로서의 유감을 표명함.

- 일부 추가된 종의 사회 경제적 이익이 적절하게 평가되거나 고려되지 않았다고 언급함.

❍ 유럽지주기구(European Landowners Organization, ELO) 사무총장은 환경 전문가뿐만 아니라 경제 전문가도 침투외래종과 관련한 위험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언급함.

※ 자료: Agra Europe (2017. 07. 12.)

일본, 호주와의 할랄식품 인증제도 비교

❑ 할랄식품과 할랄인증제도

❍ 미국 싱크탱크(Think Tank)의 Pew Reserch Center 조사에 따르면 현재 무슬림 인구는 세계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15년 후에는 3분의 1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됨.

❍ 할랄(Halal)[1]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이며 이슬람법(Shari'a 샤리아) 기준에 따라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함.
- 샤리아는 무슬림 일상 전체를 규정하는 것으로 무슬림에 있어서 할랄은 결코 어겨서는 아니 되는 것임.

❍ 할랄은 식품에도 존재하며, 돼지고기나 알코올 등을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비 할랄성분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이슬람 교주가 계율에 근거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식품을 "할랄식품"이라고 부름.
- 이슬람 율법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은 고기 외에도 양서류, 날카로운 이빨과 어금니를 가진 동물(호랑이, 곰, 코끼리, 고양이, 원숭이 등)의 고기와 피, 술 등이 할랄에는 없는 대표적인 것으로 규정됨.

❍ 일본에서도 이슬람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기업은 많지만, 불교와는 다른 종교상의 율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할랄은 국가에 따라 적용 기준, 제도, 인증 등이 상이함.

❍ 할랄과 관련한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인증제도인 "할랄인증"은 각 국가의 정부 또는 국가 내 주요 이슬람단체가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일된 실용기준이 없는 상황임.

---

1) 과일, 채소, 곡류 등 모든 식물성 음식과 어류, 어패류 등 모든 해산물과 같이 이슬람 율법 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임. 육류 중에서는 이슬람식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된 고기(주로 염소고기, 닭고기, 쇠고기 등), 이를 원료로 한 화장품 등이 할랄제품에 해당함. 반면 술과 마약류처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 돼지고기, 개, 고양이 등의 동물, 자연사했거나 잔인하게 도살된 짐승의 고기 등과 같이 무슬림에게 금지된 음식을 하람(Haram)푸드라고 함(네이버 시사상식사전).

- 국제식품규격 CODEX는 CAC/GL 24-197에서 할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통일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지 않음.

호주의 할랄식품 수출 제도

❍ 최근 호주의 무슬림 인구는 증가하였으나, 이에 따른 할랄식품의 증가는 아직 미미한 수준임.

- 2011년 실시된 국세조사(国勢調査)에 따르면 할랄식품은 전체 식품시장의 약 2.2%를 차지함.

❍ 호주 정부는 농업수출 주력상품인 쇠고기, 양고기 등의 적색육 수출 확대를 위해 할랄 인증제도의 법제화에 몰두하여 왔음.

❍ 호주의 할랄 육류식품 수출에 관한 근거법은 2005년 규정된 “육류 및 육류제품 수출관리법”임.

- 호주 농업부는 이 법에 근거하여 호주 정부가 인정하는 할랄프로그램(AGAHP)을 통지함.
- “AGAHP”에는 할랄 육류식품의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처리, 해체, 가공, 보관, 비할랄 육류식품과의 분리, 이송방법, 증명서의 발행 등)이 규정되어 있음.

❍ 해외로 할랄식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농업부가 관리·감독 및 ·승인하는 국내 이슬람단체(AIO, 6월 9일 시점에 23단체가 등록됨)로부터 인증이 필요함을 규정함.

- 또한 AIO가 인정한 이슬람 교주가 계율에 근거한 방법으로 가공 및 처리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음을 규정함.

❍ 호주 정부는 할랄 육류식품 관련 법제화로 통일된 기준이 규정하여 이슬람 국가를 중심으로 호주산 적색육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

호주와 일본의 할랄 인증제도 비교

❍ 호주에서는 정부가 전반적인 할랄 인증제도를 관리하며, 국내의 육가공처리업자가 실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효과적·효율적 제도가 구축되어 있음.

- 호주는 주요 쇠고기 수출국으로서 무슬림을 겨냥한 쇠고기의 수출 전략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임.

❍ 현재, 호주 국내의 육류식품 가공처리장의 80~90%은 할랄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유통하는 쇠고기의 80%이상이 할랄인증을 받은 쇠고기임.
- 일본에서는 할랄 처리만을 구별하여 시행하고 있는 반면, 호주에서는 시설단위로 할랄을 구분함.

❍ 무슬림을 겨냥한 할랄 증명서를 함께 교부하여 수출하고 있는 쇠고기는 약 20~30%를 차지하며, 쇠고기 수출 시 정부의 위생증명이 필수적임.
- 또한 수출용 할랄 쇠고기 관련 증명서는 AIO가 추가증명을 하여야 함.

❍ 호주 정부는 스터닝(Stunning; 가공처리 직전 기절시키는 것)의 여부 등에 대해서도 AIO에서 파견된 할랄 슈퍼바이저가 1두 당 스터닝 의한 직접적인 사인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지원함.
- 이는 육류식품 가공처리업자에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임.

❍ 일본의 경우 민간이 할랄인증을 받고자하는 경우, 육류식품 가공처리업자에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슬람단체마다 인증 기준이 달라 이에 따른 피해도 발생함.

❍ 또한 호주의 경우, 일본과 비교하여 국토가 넓고, 돼지 사육두수도 적기 때문에 돼지고기의 오염(혼입)도 문제가 되지 않음.

※ 자료: JETRO(2017.06.29.)

일본, 지방의 가축동물 수의사 부족 문제

❑ 일본, 가축동물 수의사 편재 문제

❍ 일본에서 학교법인 "카게(加計)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됨.
- 수의학부 신설을 둘러싼 총리의 의향 등 절차론에 대한 비판이나 보도를 시작으로, 정부의 가축 수의사의 편재라는 과제의 본질적인 논의 필요성도 제기됨.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 가축방역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학의 수의학부 개설을 통한 가축 수의사 확대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음.
- 그러나 가축방역 문제가 대학 개설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며, 가축 수의사의 처우 개선, 가축동물 수의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향상 등 폭넓은 대책이 요구됨.

❍ 2007년 이후 카게학원과 애히메 현(愛媛県) 이마바리 시(今治市)는 15차례에 걸쳐 이마바리 시에서 수의대 신설을 요구하여 왔으나,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에 의해 기각되었음.

❍ 그러나 이마바리 시가 국가 전략 특구로 지정되면서, 국가 전략 특구 자문회의가 수의학부 신설을 허용함.
- 2017년 1월, 이마바리 시의 수의학부 설립 사업자로 카게학원이 선정됨.

❍ 카게학원은 가축 전염병에 대한 초기 대응과 학술적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수의학부가 없는 시코쿠 지방에 수의학부를 신설한다는 전략을 내세워 특구로 인가를 얻음.

❍ 가축수의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치 현(高知県)의 수의사들은 시코쿠에 수의대가 없기 때문에 수의학부 개설로 가축 질병 대응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며 환영함.
- 반면 시코쿠뿐만 아니라 동해와 규슈 지방의 가축 수의사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음.

수의사의 지역 불균형 문제

❍ 일본 농림수산성은 전국 수의사 수는 2014년 기준 3만 9000명이며, 전반적인 수의사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부적인 직무의 불균형 문제가 심하다고 분석함.
-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가 약 40%로 가장 많은 반면, 소나 돼지 등 가축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수의사는 약 20%에 그침.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동물 수의사 확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 심각한 가축 감염성 질병이 발생하면 방역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높음.

❍ 지방에 수의학 대학을 개설하는 것만으로 가축방역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2014년 8월 개최된 국가 전략 특구 워킹그룹의 회의록에 따르면, "지방 대학에 수의학부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지방 수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 회의록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수의학부가 있는 전국의 16개 대학을 도시형(삿포로, 도쿄, 나고야, 오사카 근교)와 지방형으로 나누어 입학률과 취업률을 분석하였음.
- 지방에서는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서 입학하고 타지역에 취업하는 경향을 분석하며, 지방의 경우 졸업생들이 꼭 그 지역에 정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지적함.

일본 수의사협회의 입장

❍ 일본 수의사협회는 특구에 따른 수의학부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음.
- 대학의 입지나 학생의 증가가 반드시 수의사의 불균형 문제 해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수의사 수급 대책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함.

❍ 또한 수의사협회는 현장에서 가축임상을 교육하는 전임 교원의 확보가 최대의 과제라고 현 상황을 지적함.
- 수의학부 신설에 대하여 총리의 의향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의사협회 키타무라 나오토(北村直人) 고문은 정치적인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며, 이를 논할 입장이 아니라고 함.

가축동물 수의사 처우개선 필요

❍ 수의사 교육 개선 등에 힘써 온 식품안전 및 안심재단의 카라키 히데아키(唐木英明) 이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수의사라고 하면 반려동물 수의사를 떠올리며, 가축동물 수의사로서의 축산업 및 나아가 식품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직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함.

- 또한 지방에 가축동물 수의사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함께 급여 및 근무 형태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우선이라고 지적함.」

※ 자료: 일본농업신문(日本農業新聞) (2017.06.16.)